

여론조사꽃 제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6_03

ARS+CATI

제42차 ARS조사

제27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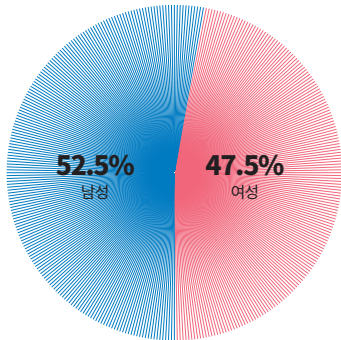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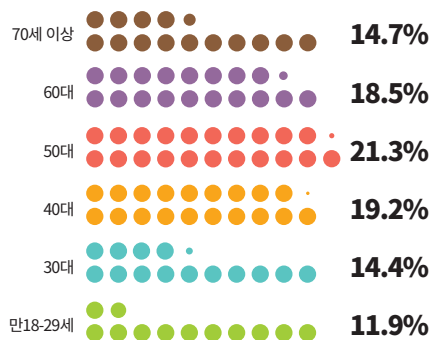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2.1% [총 통화시도 48,550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16일 ~ 6월 1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8	100.0%	1,008	100.0%	1.00
성별	남성	529	52.5	500	49.6	0.95	
	여성	479	47.5	508	50.4	1.06	
연령	만18~29세	120	11.9	166	16.5	1.38	
	30대	145	14.4	151	15.0	1.04	
	40대	194	19.2	183	18.2	0.94	
	50대	215	21.3	196	19.4	0.91	
	60대	186	18.5	171	17.0	0.92	
	70세 이상	148	14.7	141	14.0	0.95	
	서울	196	19.4	189	18.8	0.96	
지역	인천·경기	317	31.4	320	31.7	1.01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6	10.5	1.00	
	광주·전라	99	9.8	99	9.8	1.00	
	대구·경북	95	9.4	99	9.8	1.04	
	부산·울산·경남	151	15.0	151	15.0	1.00	
	강원·제주	44	4.4	44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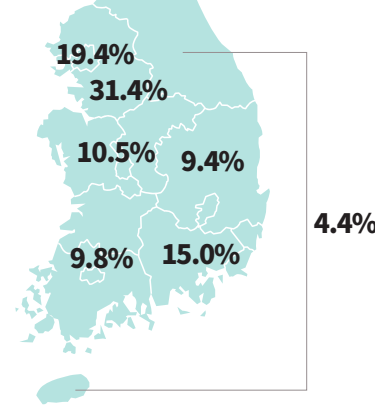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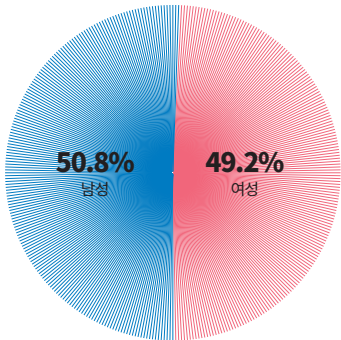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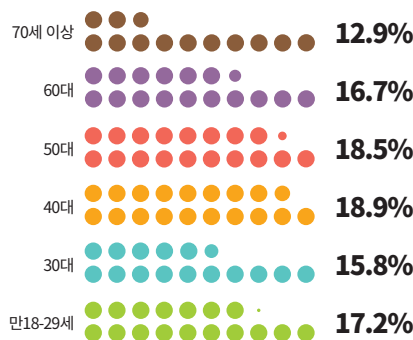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6.3% [총 통화시도 6,245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16일 ~ 6월 1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7	100.0%	1,017	100.0%
성별	남성	517	50.8	505	49.7	0.98	
	여성	500	49.2	512	50.3	1.02	
연령	만18~29세	175	17.2	167	16.4	0.95	
	30대	161	15.8	151	14.8	0.94	
	40대	192	18.9	184	18.1	0.96	
	50대	188	18.5	199	19.6	1.06	
	60대	170	16.7	173	17.0	1.02	
	70세 이상	131	12.9	143	14.1	1.09	
	서울	188	18.5	191	18.8	1.02	
지역	인천·경기	327	32.2	324	31.9	0.99	
	대전·세종·충청	111	10.9	107	10.5	0.96	
	광주·전라	100	9.8	99	9.7	0.99	
	대구·경북	98	9.6	99	9.7	1.01	
	부산·울산·경남	147	14.5	152	14.9	1.03	
	강원·제주	46	4.5	45	4.4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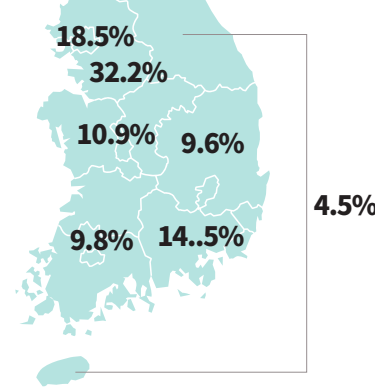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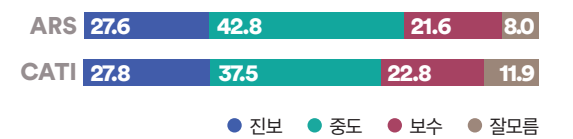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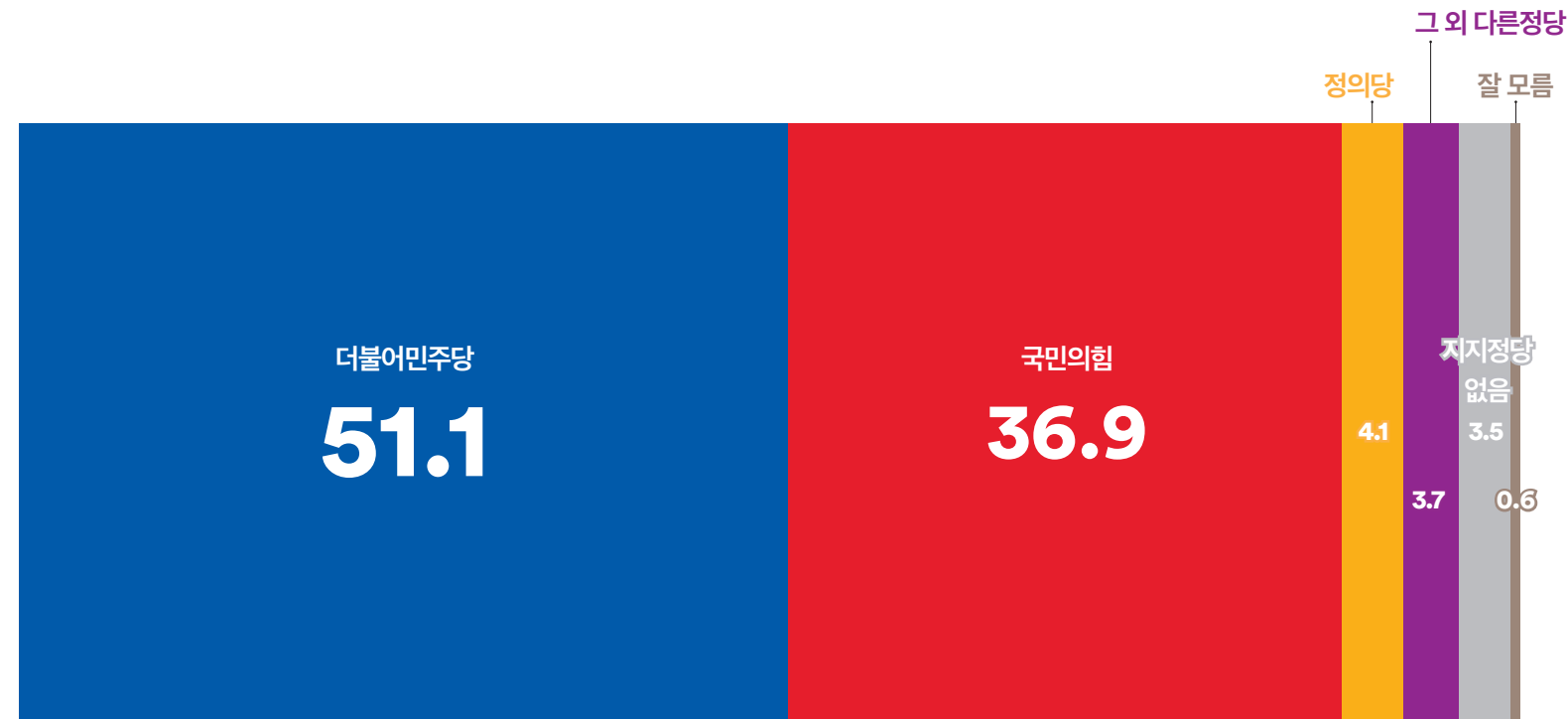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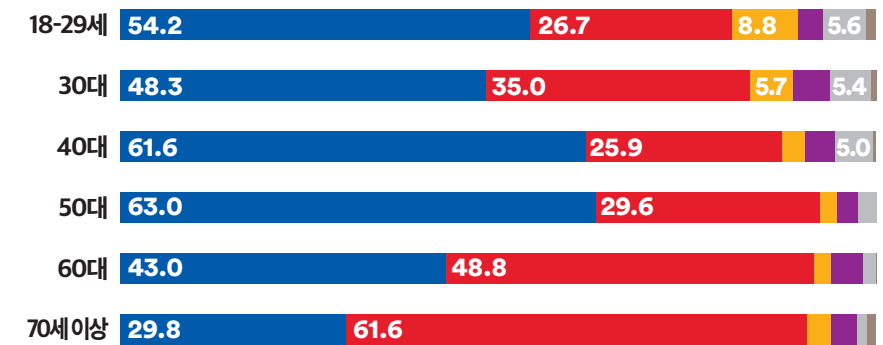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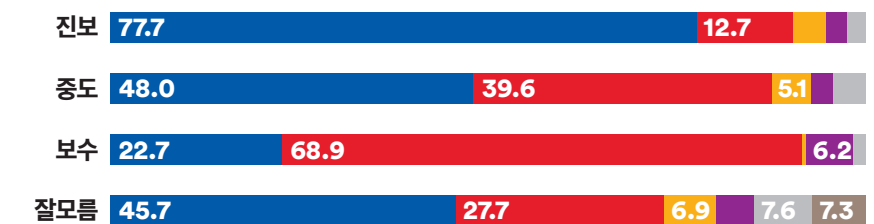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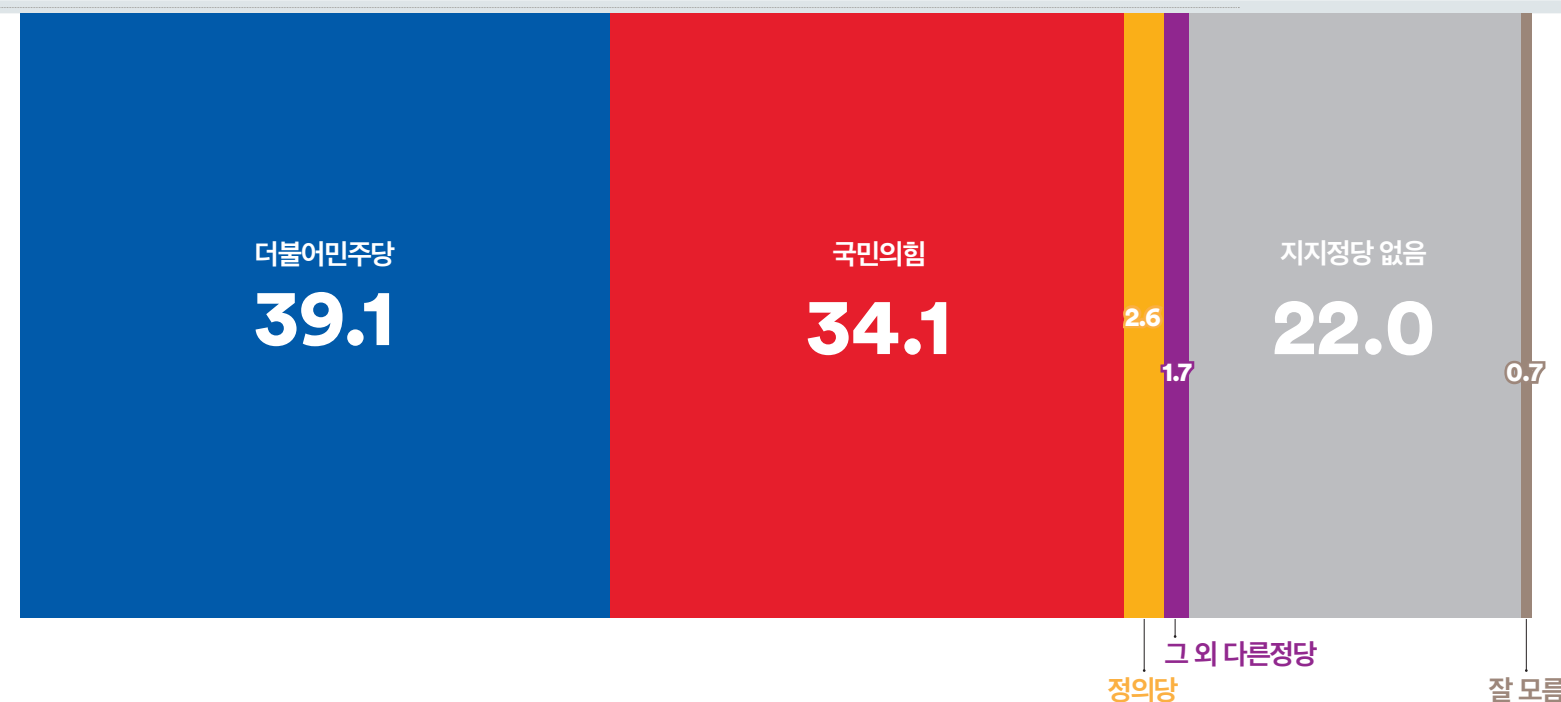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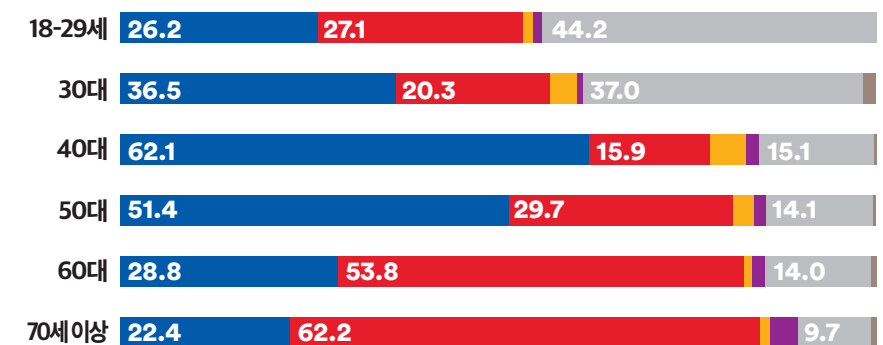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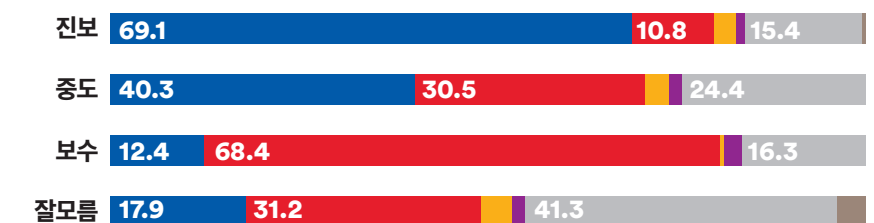
CATI



연령



이념성향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1%p 상승, 국민의힘 3.7%p 하락 (격차 14.2%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하락, 국민의힘 4.7%p 상승 (격차 5.0%p)

경인과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TK권에서는 국민의힘이 CATI와 ARS 조사에서 모두 50% 지지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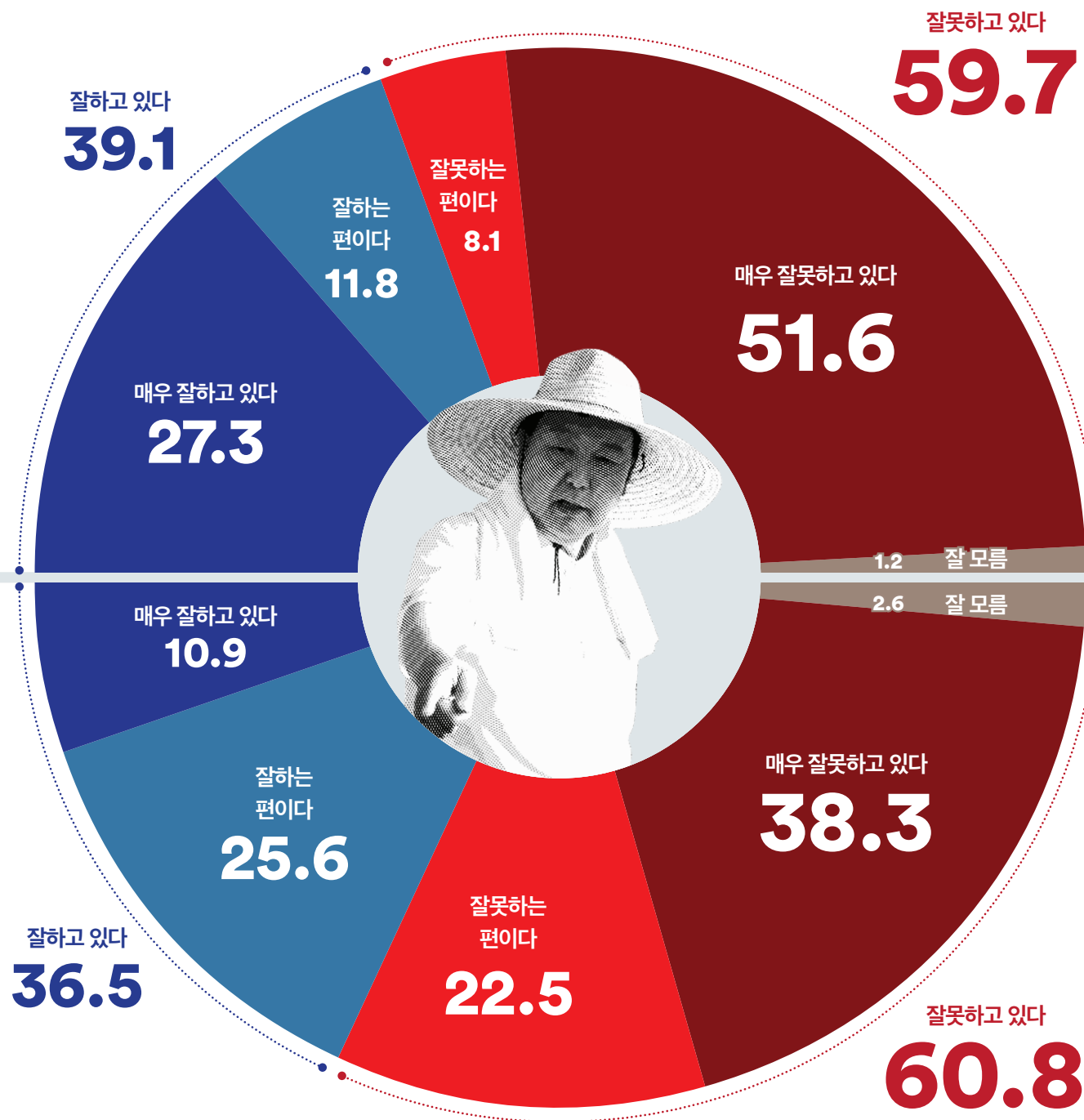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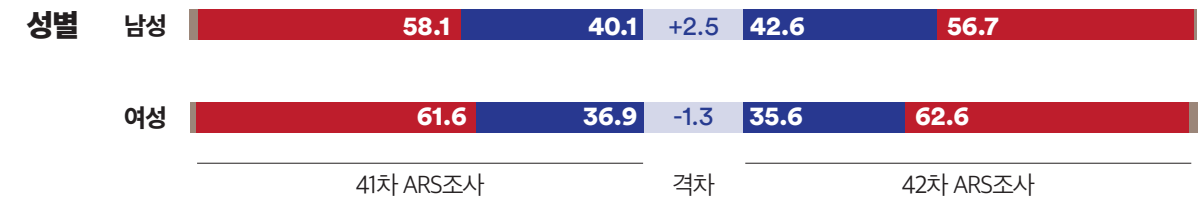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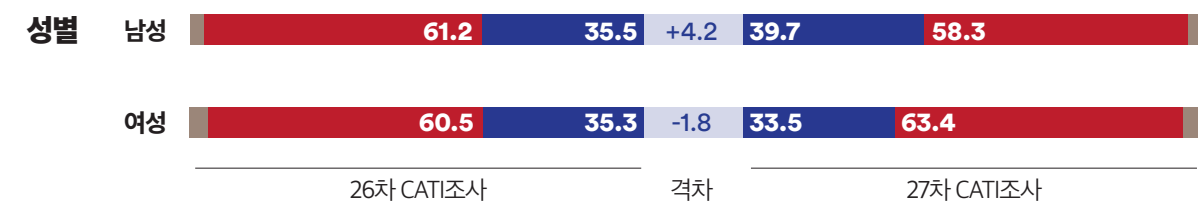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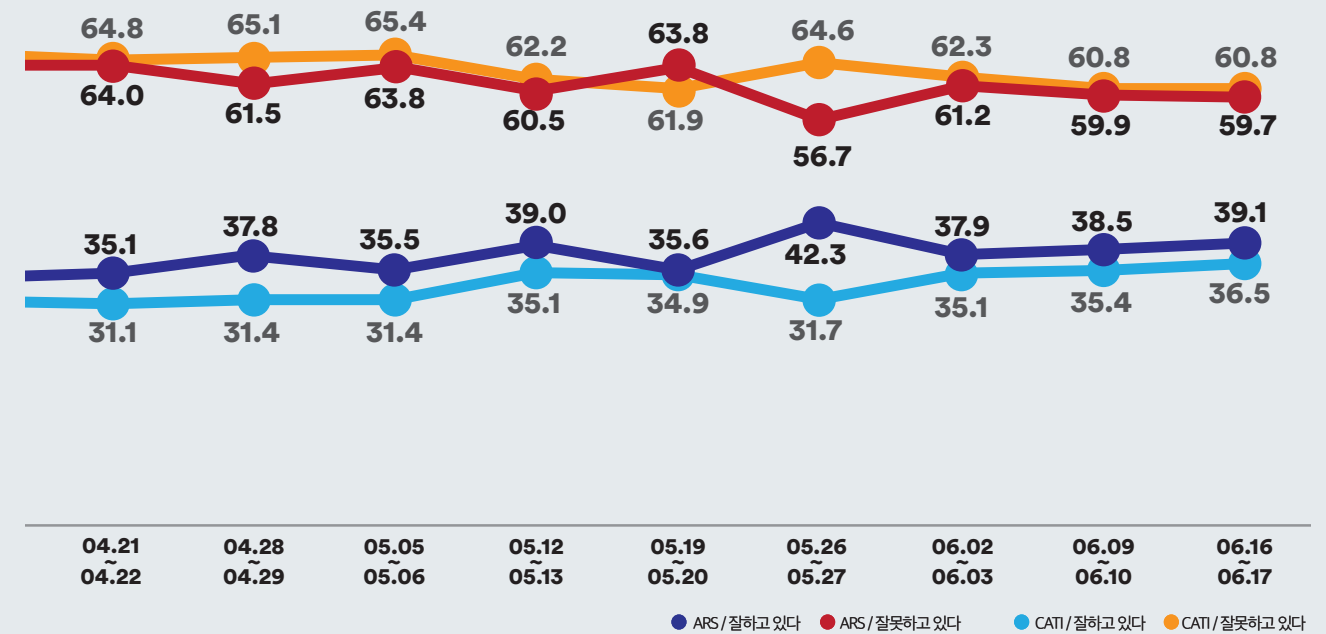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6%p 상승, 부정평가 0.2%p 하락(격차 20.6%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1.1%p 상승, 부정평가 변동없음(격차 24.3%p)
 남·녀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 수도권·호남권·충청권, 진보층·중도층에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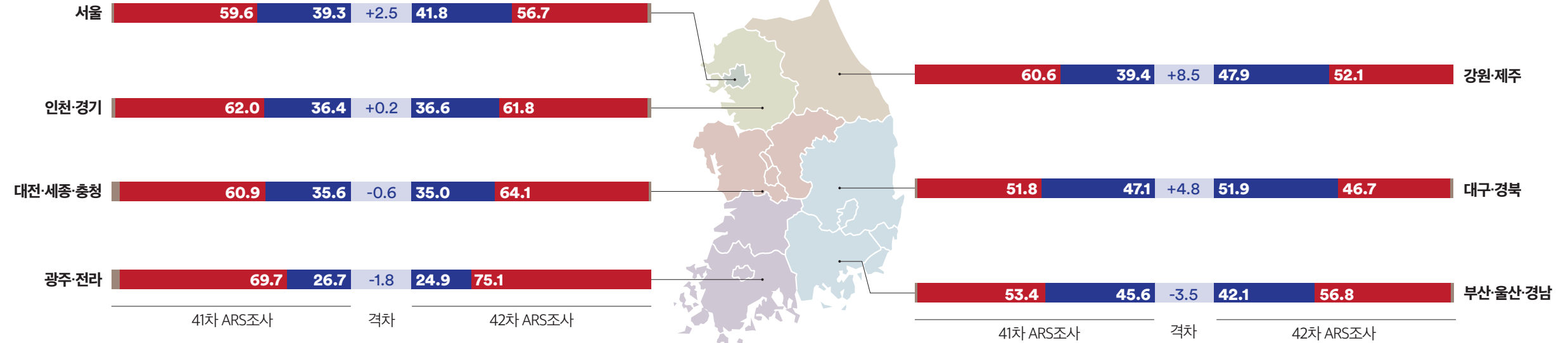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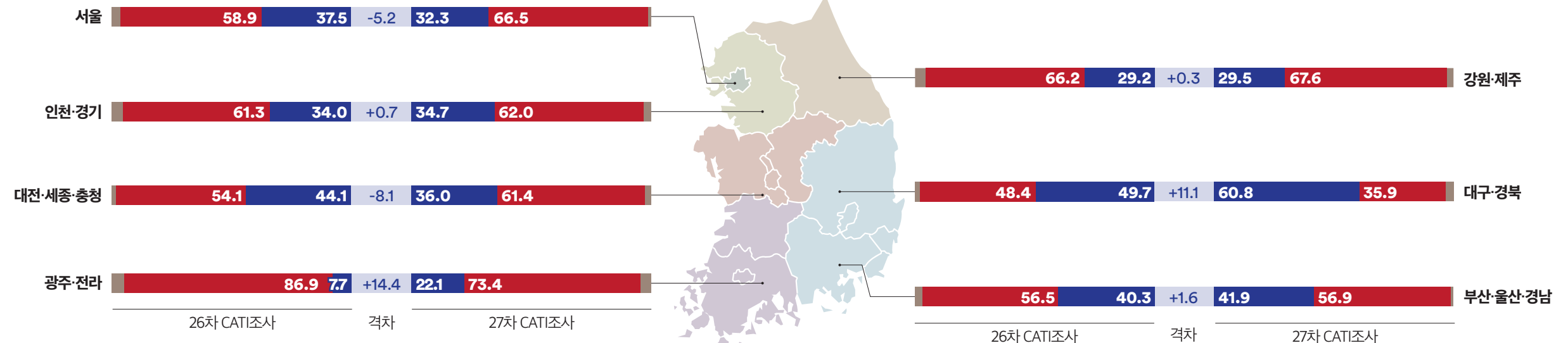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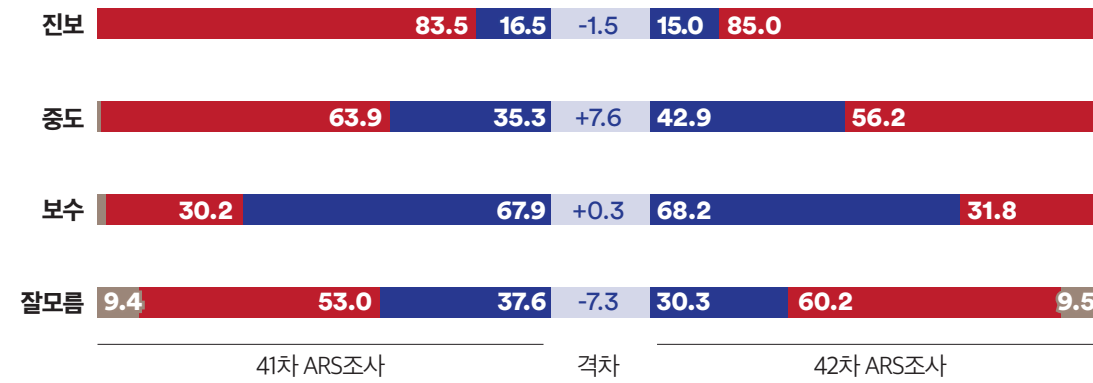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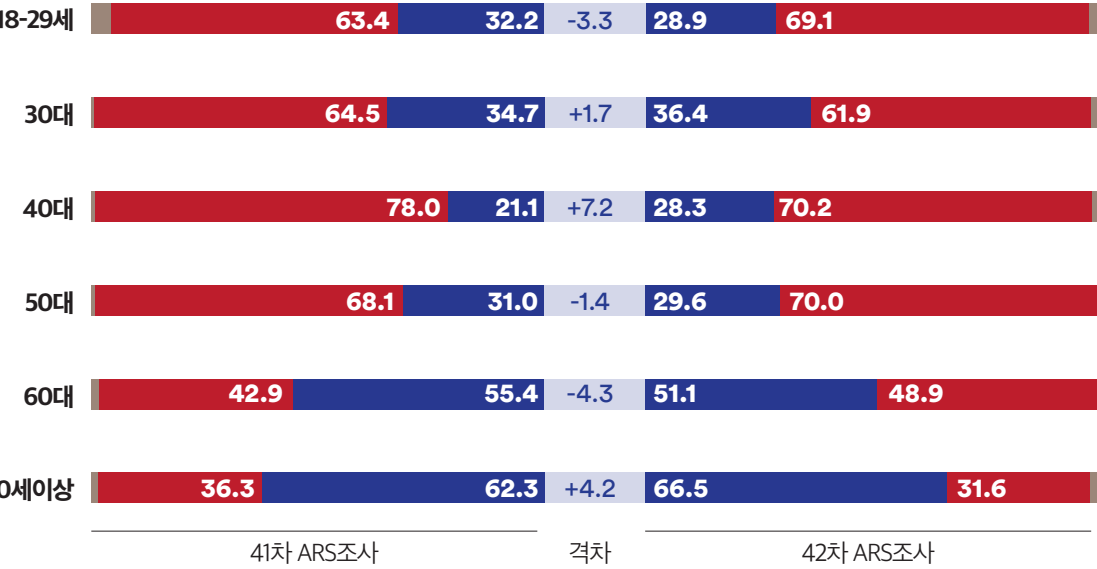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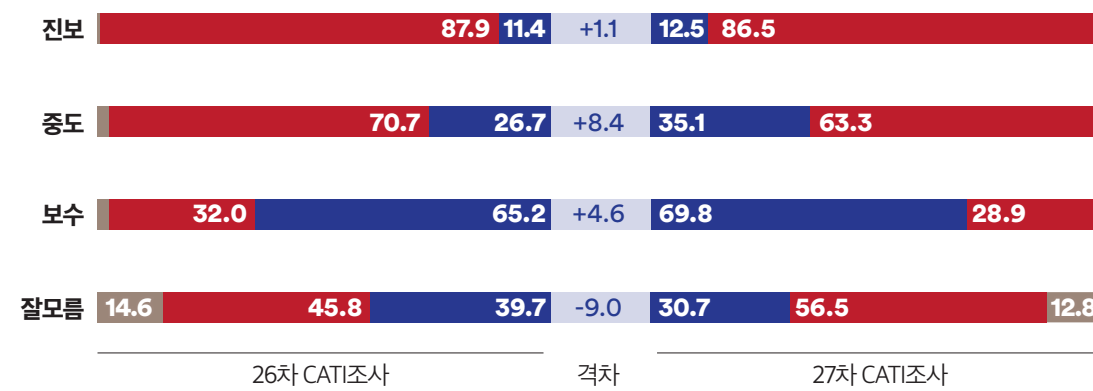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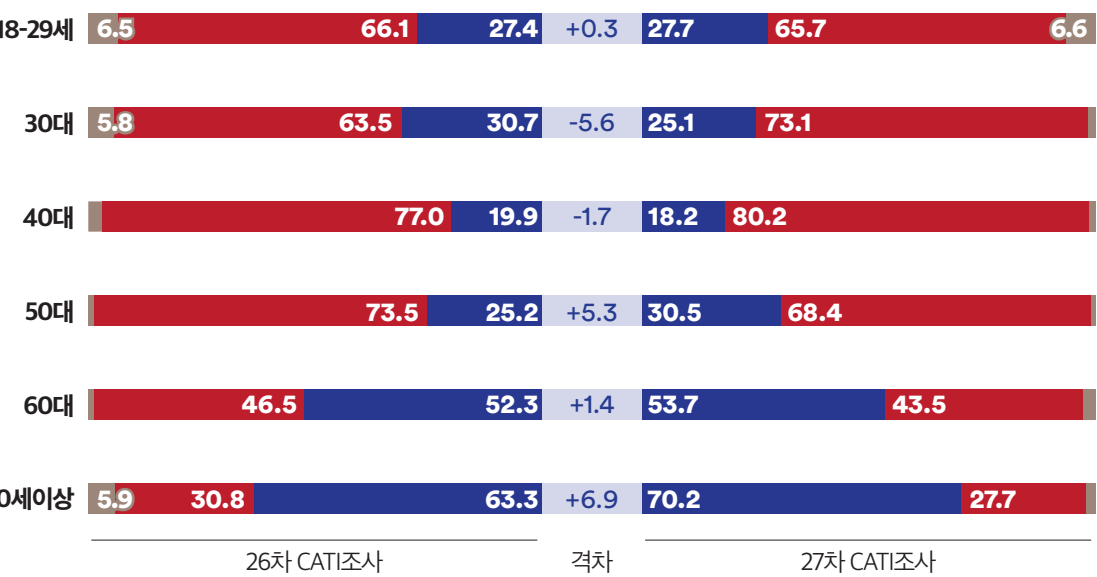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후쿠시마 오염수·대중국 외교

ARS & CATI / CATI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의 대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일까

한·중 관계: 대통령의 대응

한·중 관계: 갈등 해결 방향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15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스트론튬 농도 검출치와 관련해 “일본 배출 기준인 ℓ 리터당 30벵크렐의 1만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ℓ 당 20벵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하는 어민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를 논의하는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비판이 괴담’이라는 여당의 의견에 대해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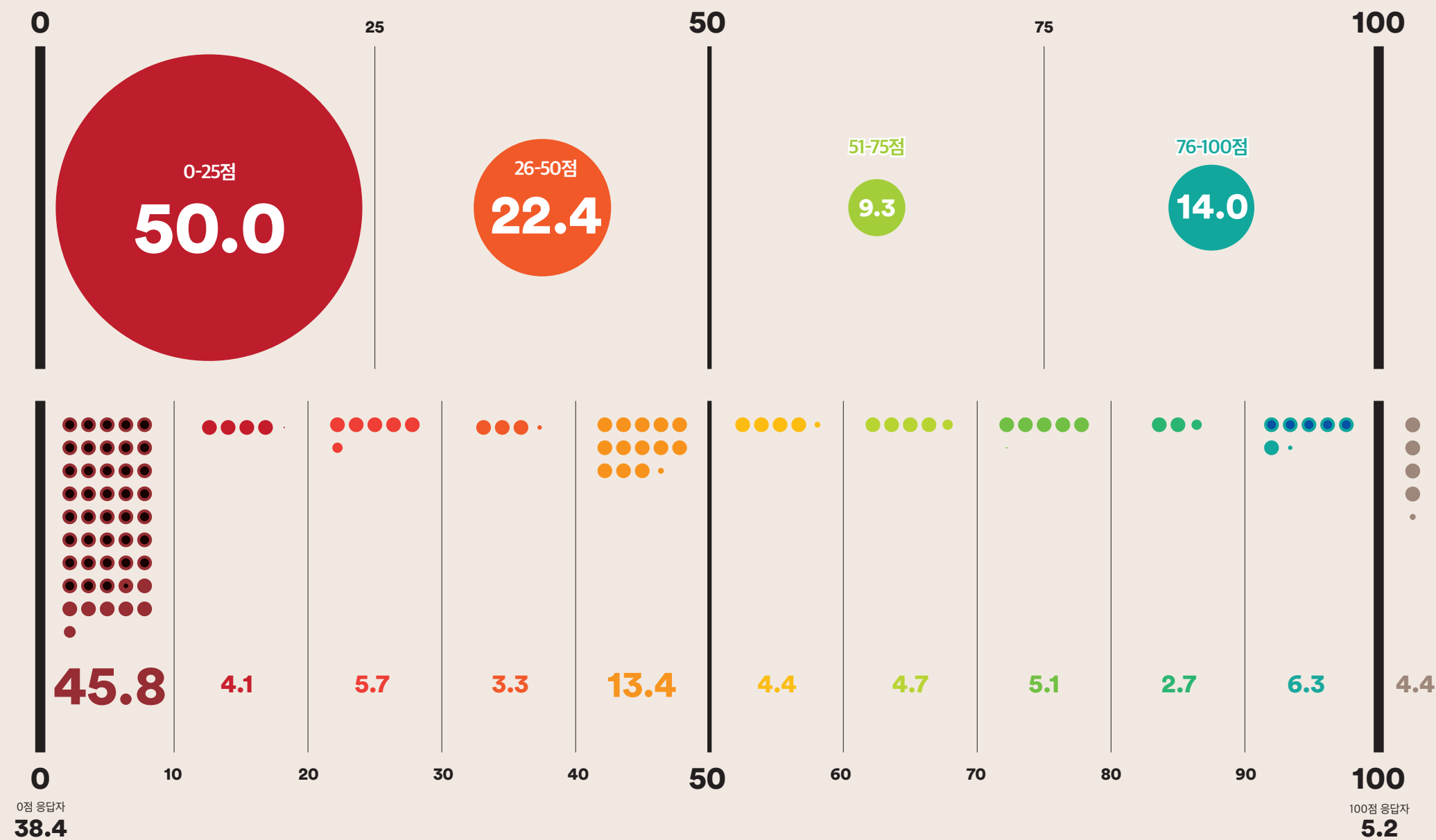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의 대처

Q. 일본이 조만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로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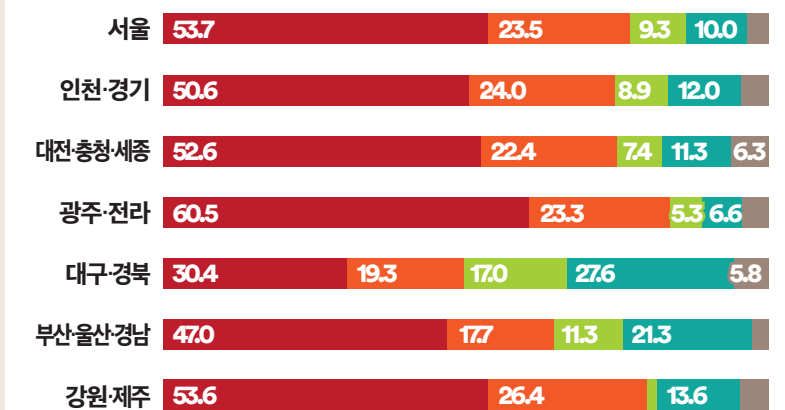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이 50점 이하로 응답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25점 이하의 점수를 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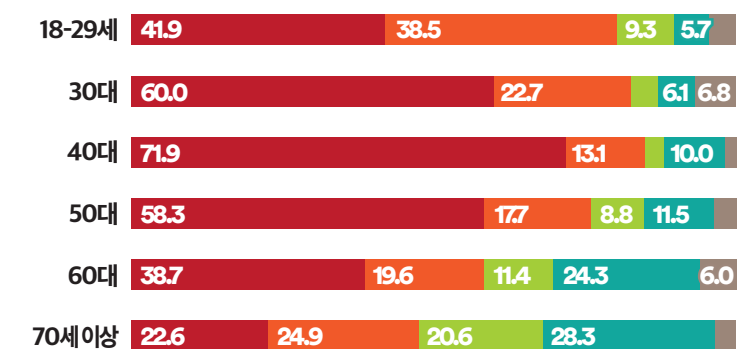
‘0점’은 10명 중 4명 정도인 38.4%, ‘100점’ 응답은 5.2%에 불과

‘0~25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40대(71.9%), ‘76~100점’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28.3%)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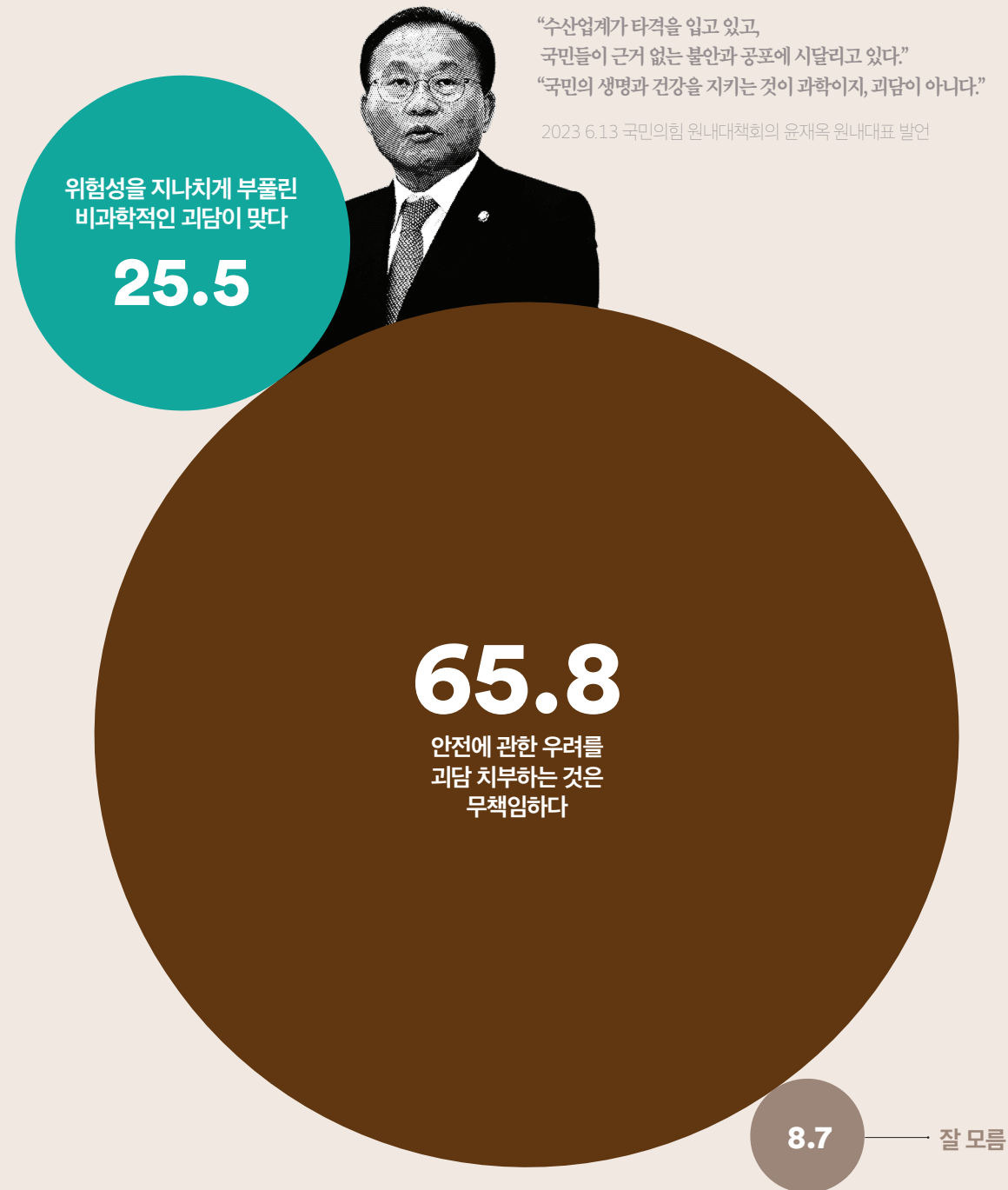
0-25점 26-50점 51-75점 76-100점 응답거부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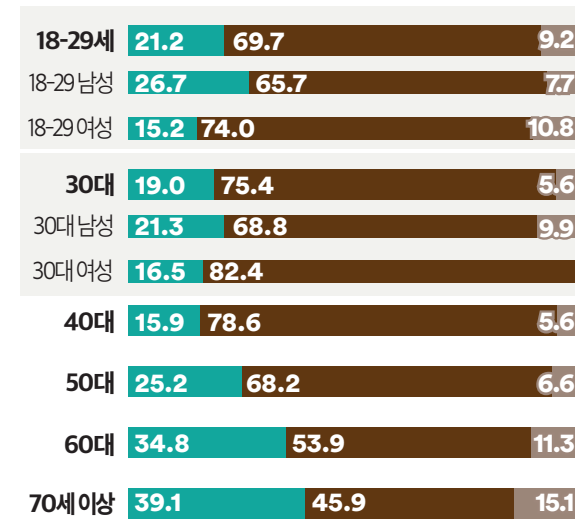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일까

Q.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비판을 여당에선 괴담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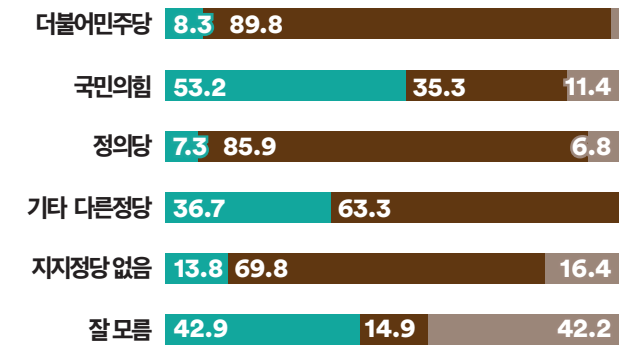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안전에 관한 우려를 괴담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괴담 치부는 무책임'이란 응답이 앞섰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TK 권역과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면 '괴담 치부는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우세
'무책임하다'는 응답은 진보층(81.9%), 중도층(68.2%), 보수층(49.8%) 모두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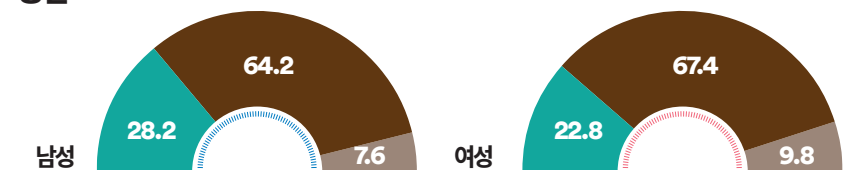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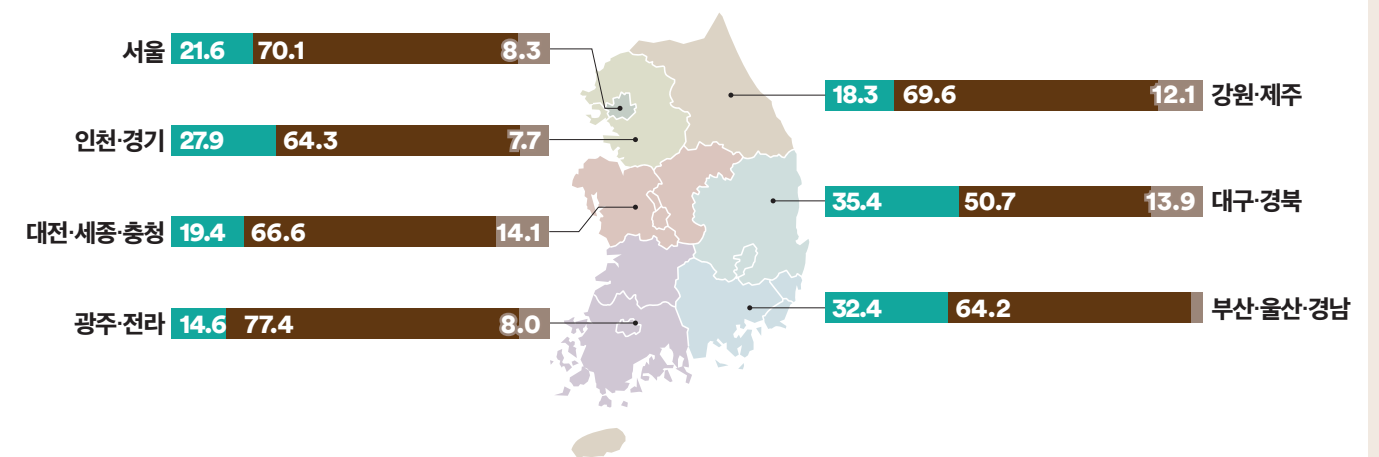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비과학적 괴담이다 괴담치부는 무책임하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한·중 관계: 대통령의 대응

Q.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로 촉발된 한·중 갈등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한 대응이다

40.8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상호 존중, 우호 증진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2023.6.13 윤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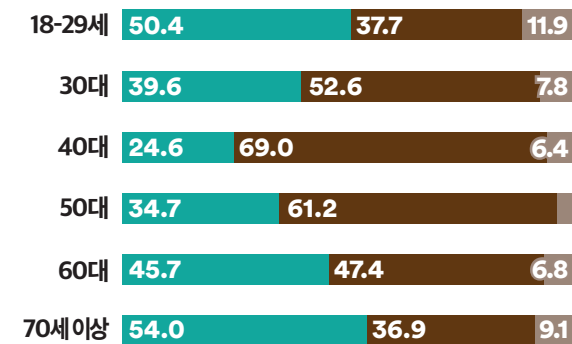
외교부 대변인 정도의 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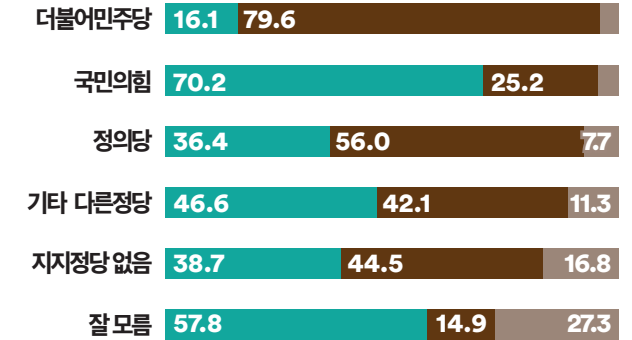
7.5 — 잘 모름

10명 중 5명 이상은 ‘외교부 대변인 정도의 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응답
수도권, 호남, 강원·제주 권역에서는 ‘대통령이 나선 것은 부적절’ 우세, TK는 ‘당연한 대응’ 우세
30~50대 응답층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앞서고, 18~29세·70세이상 응답층에서는 ‘당연한 대응’이란 응답이 앞섬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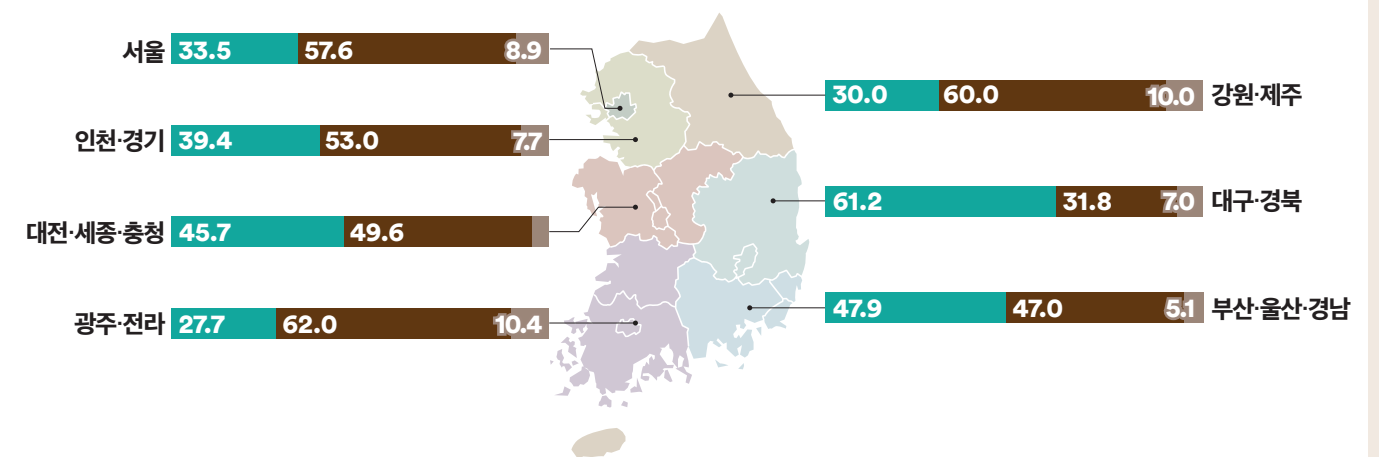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당연한 대응이다 ■ 부적절한 대응이다 ■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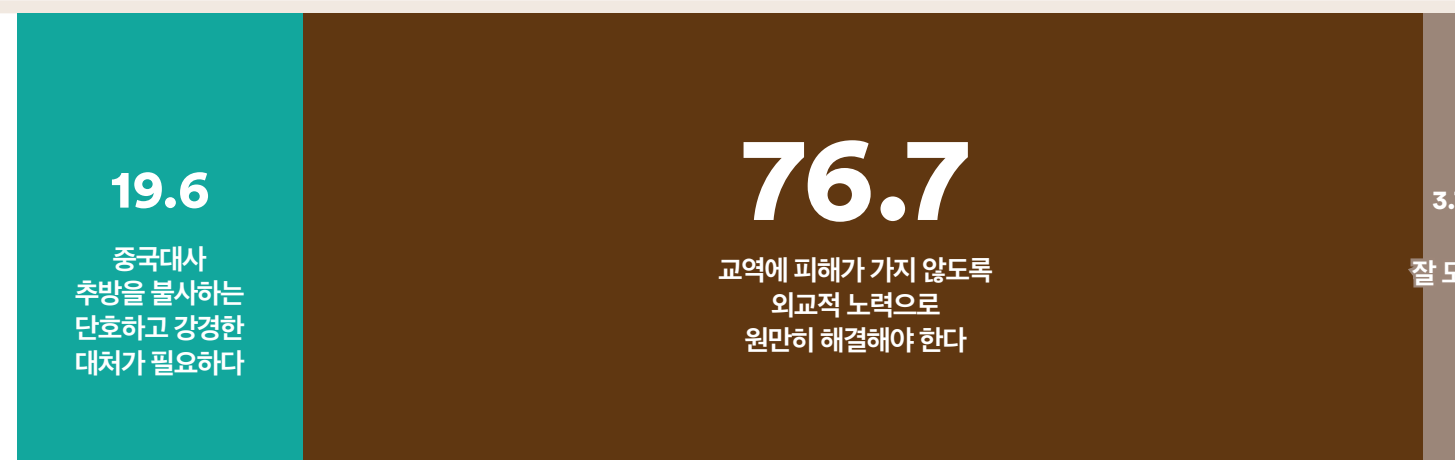
한·중관계: 갈등 해결 방향

Q. 한·중 대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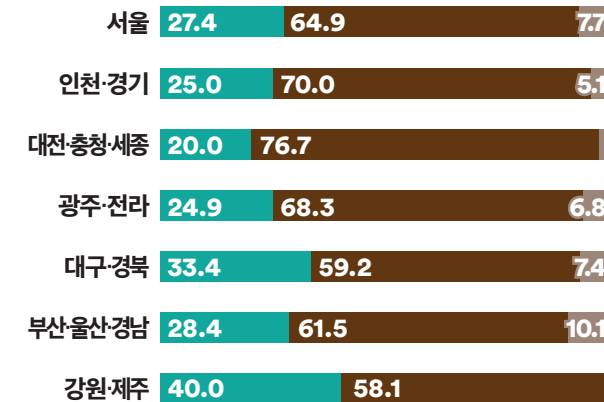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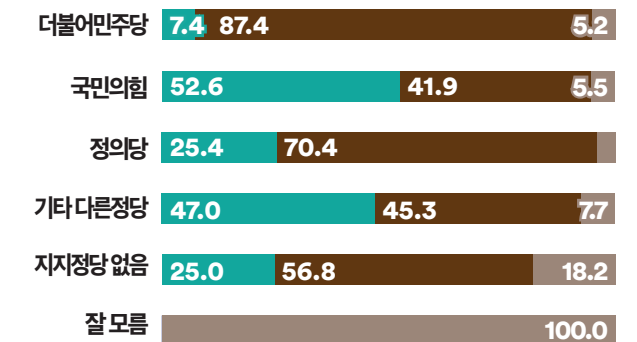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외교적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대부분의 성·연령·권역·이념성향에서 '외교적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CATI 조사에서는 '원만한 해결' 우세, ARS 조사에서는 '강경한 대처' 우세로 응답에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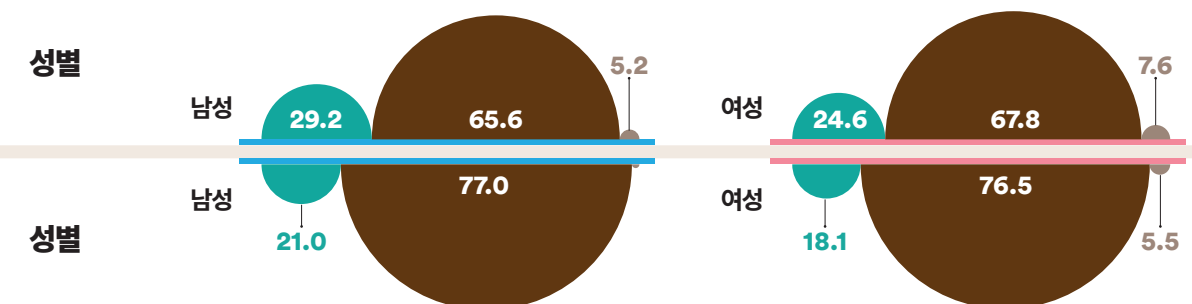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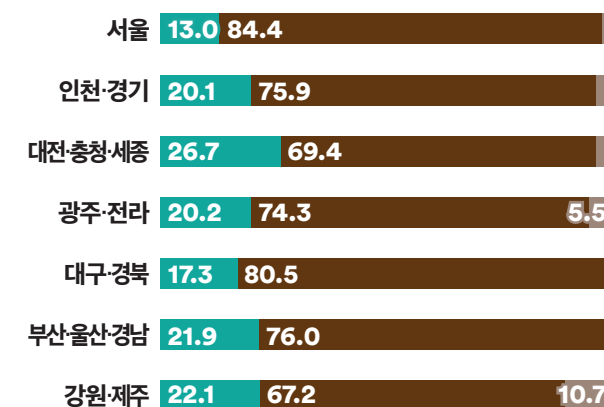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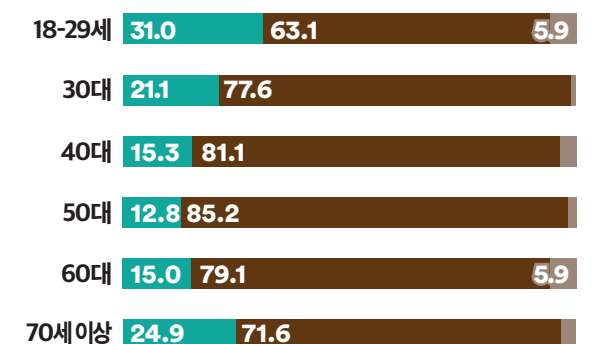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아들 학폭논란의 이동관 특보·조국 전 장관

ARS & CATI / CATI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아들 학폭 논란의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아들 학폭 논란의 이동관 특보: 해명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 대통령의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권고 11일만에 방통위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은 단 열흘간의 입법예고 후 의결이 진행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들 학폭 논란’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학폭이 아닌 단순한 상호다툼’이라는 이 특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

Q.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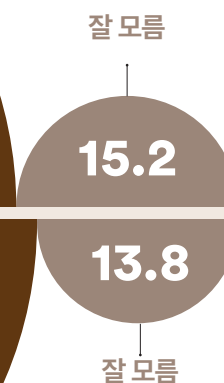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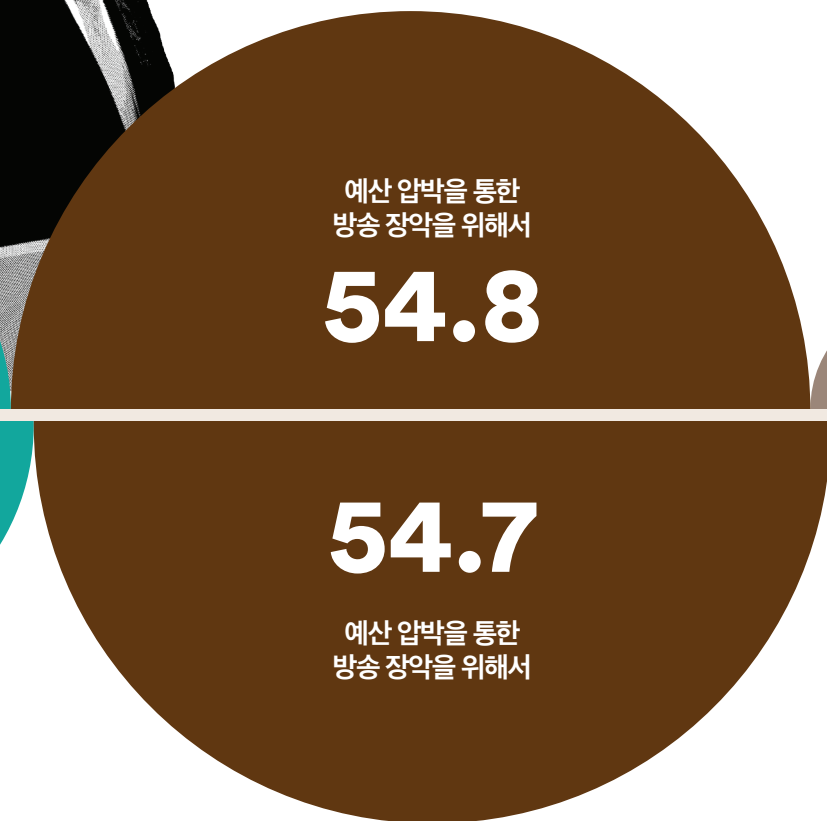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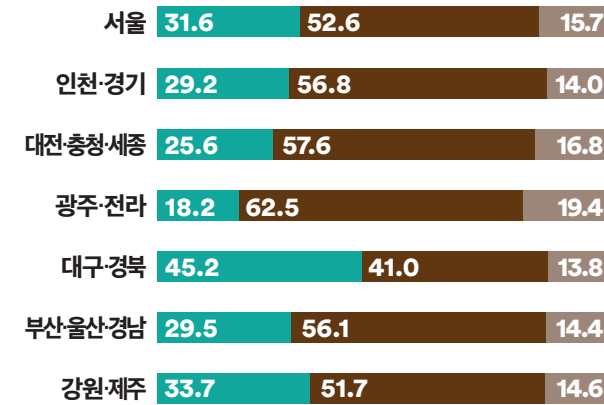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 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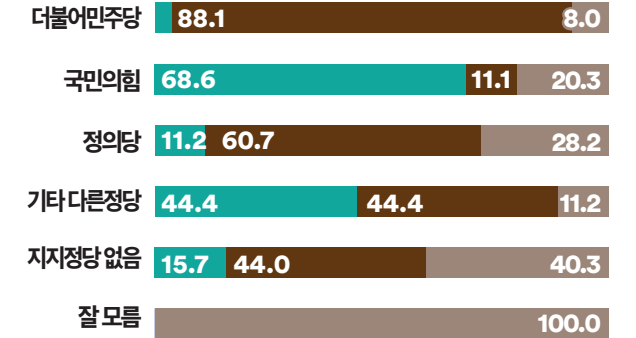
2023.6.6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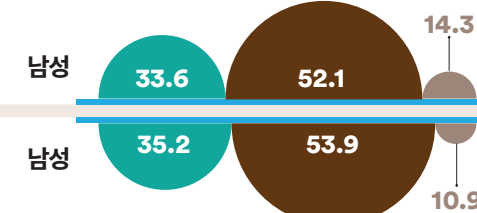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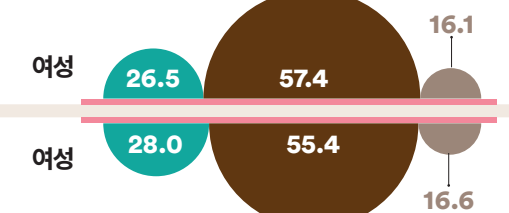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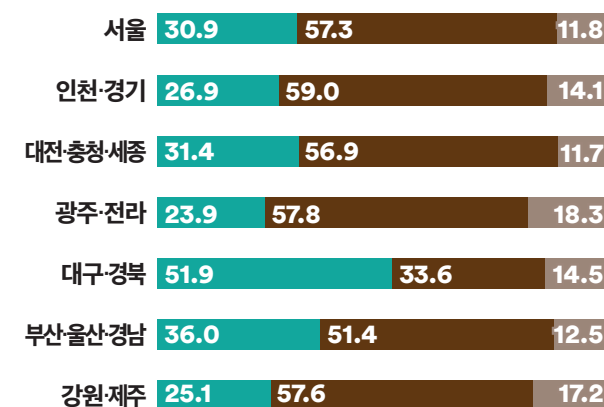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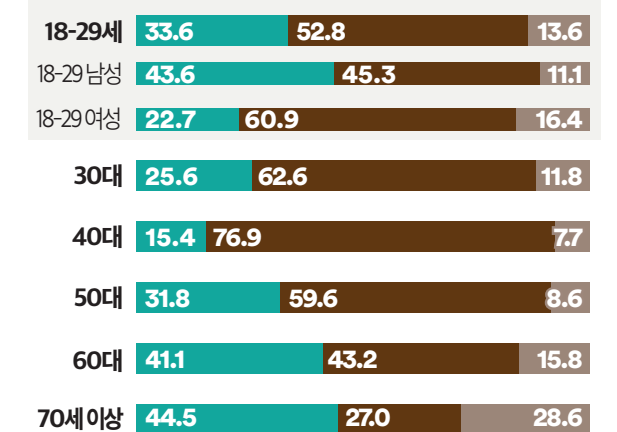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두 조사 모두 ‘예산 압박을 통한 방송 장악을 위해서’란 응답이 우세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예산 압박을 통한 방송 장악을 위해서’란 응답이 앞섬
50대 이하 응답층은 ‘예산 압박을 통한 방송 장악을 위해서’란 응답 우세, 70세 이상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앞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장악을 위해 모르겠다

이러니 놀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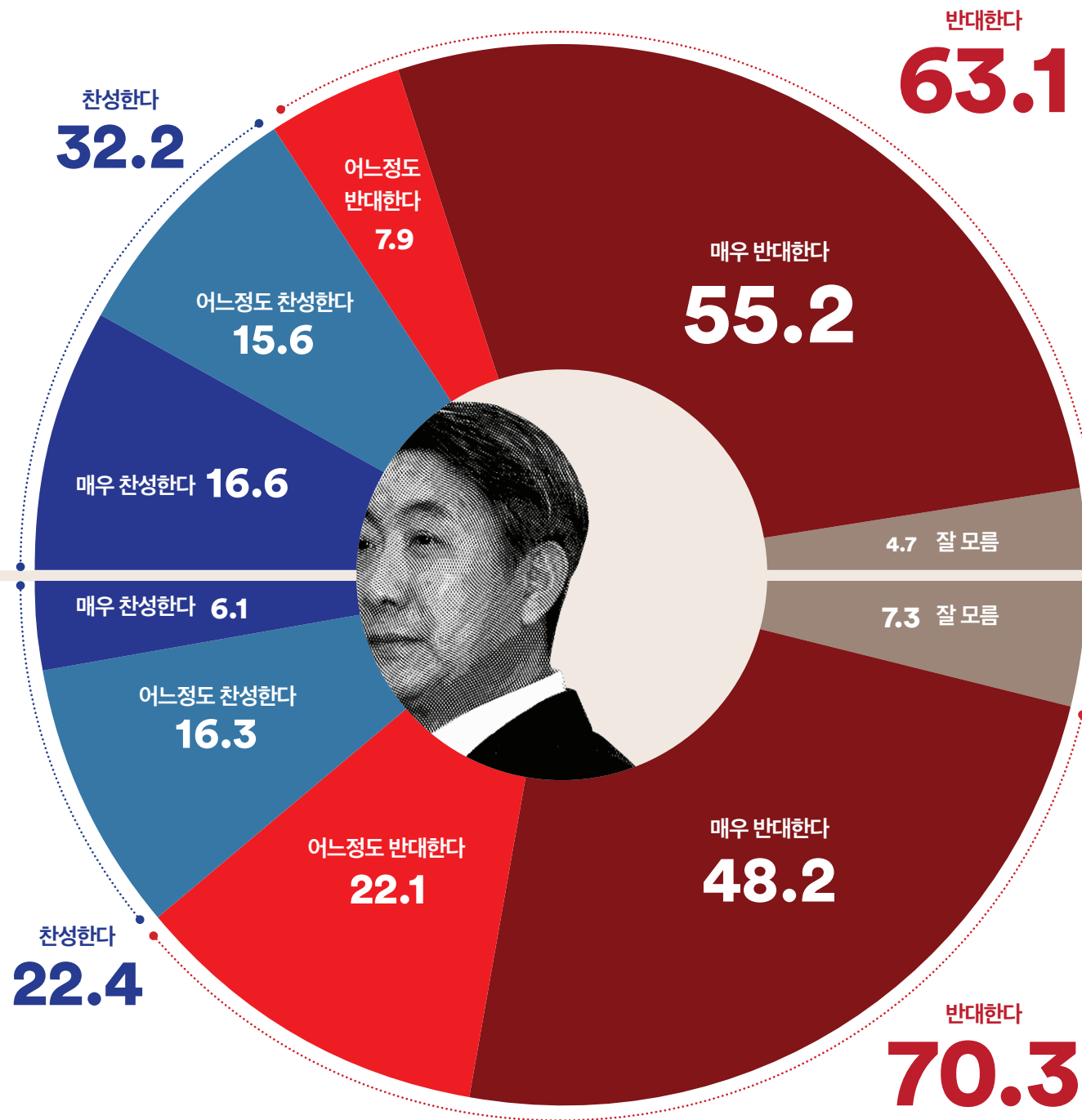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아들 학폭 논란의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Q.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폭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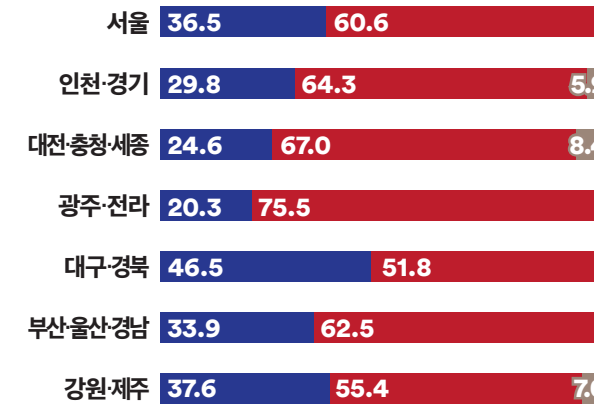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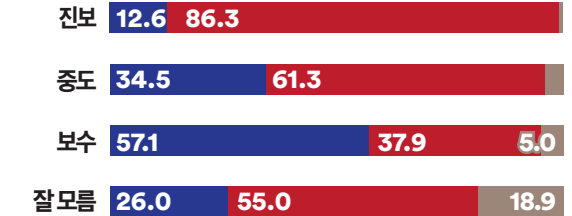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반대' 의견이 앞섬
수도권 및 충청, 호남, PK(CATI 조사는 강원·제주 포함) 및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반대' 우세, 70세 이상은 '찬성'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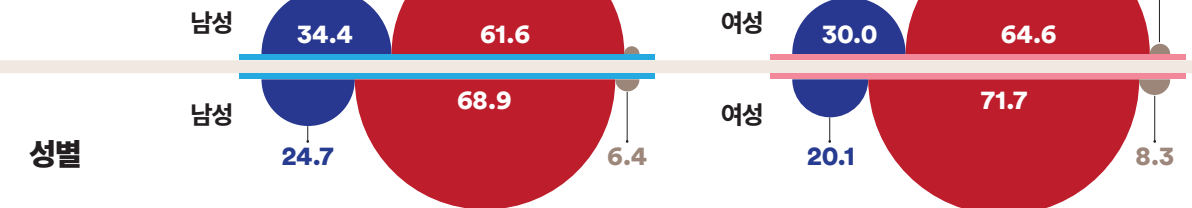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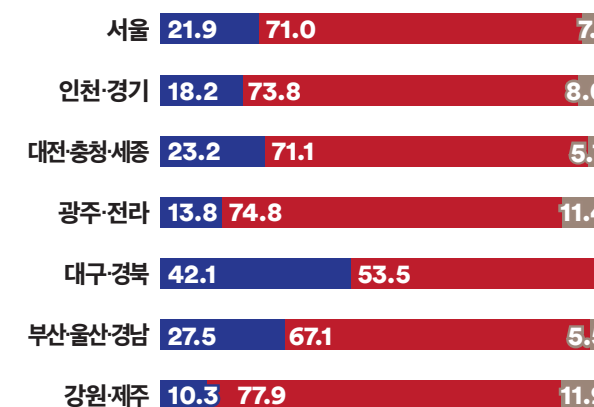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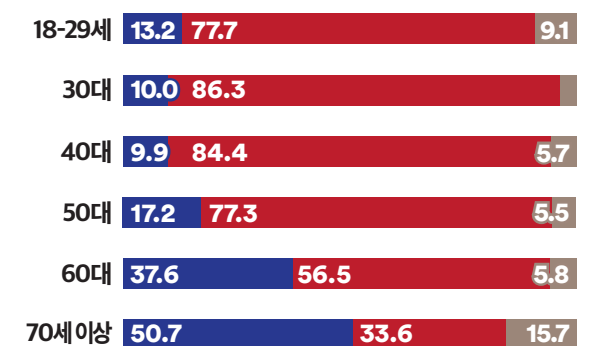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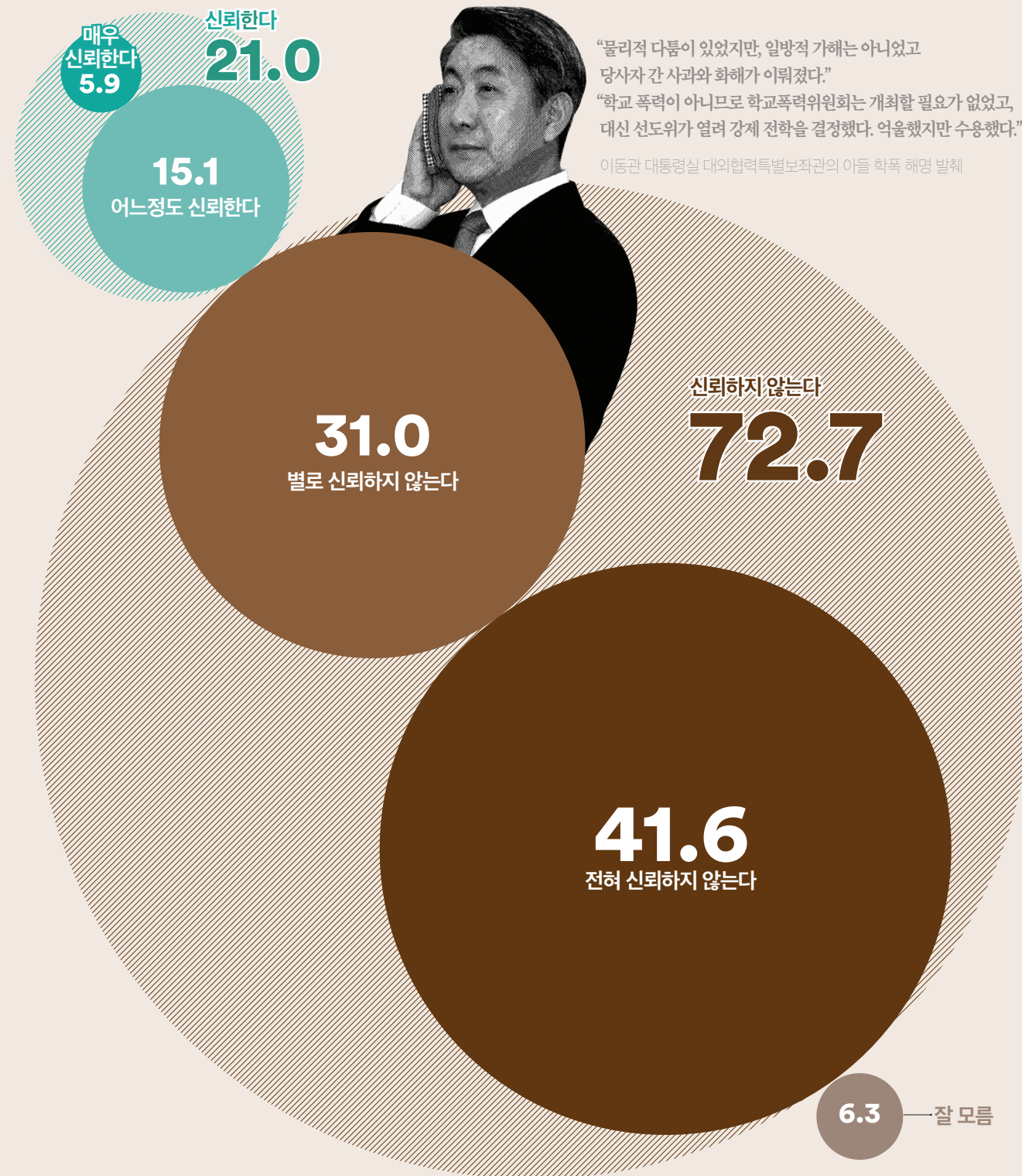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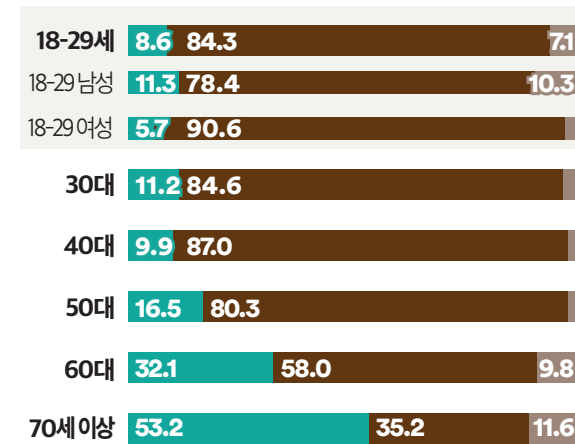
아들 학폭 논란의 이동관 특보: 해명

Q. 학폭은 없었고 단순한 상호 다툼이었다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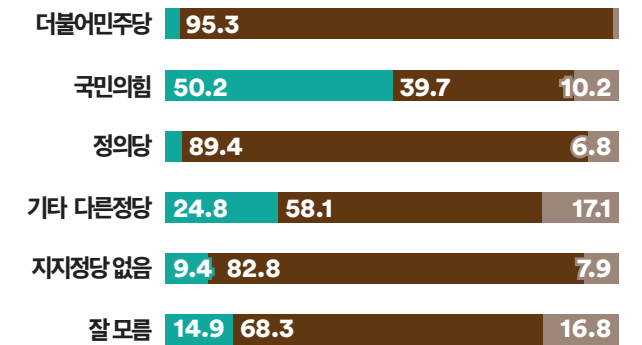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90.4%), 중도(75.3%), 보수(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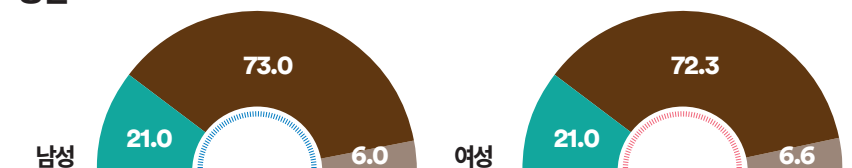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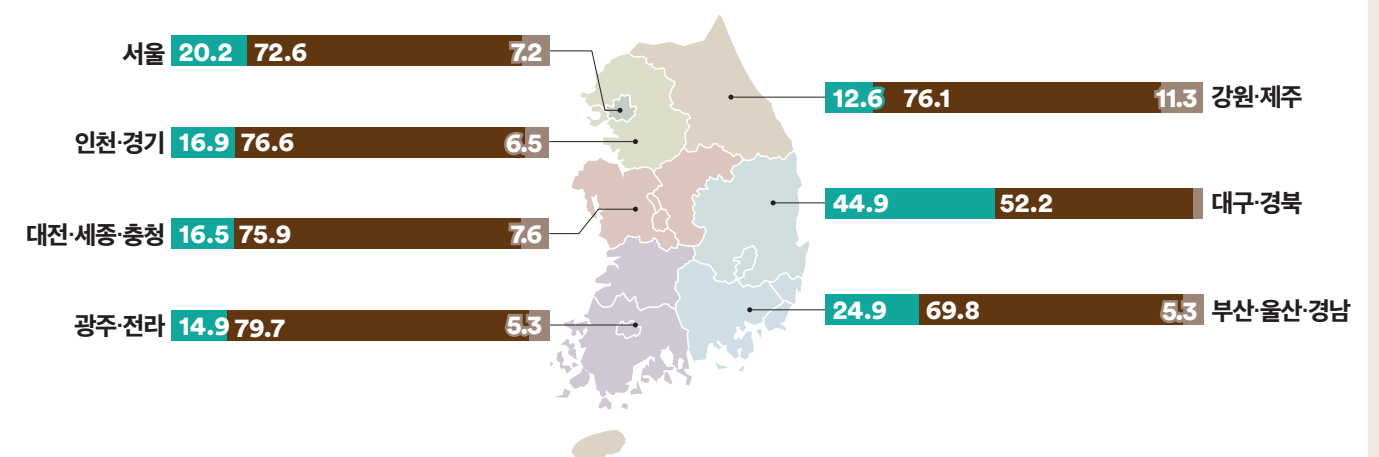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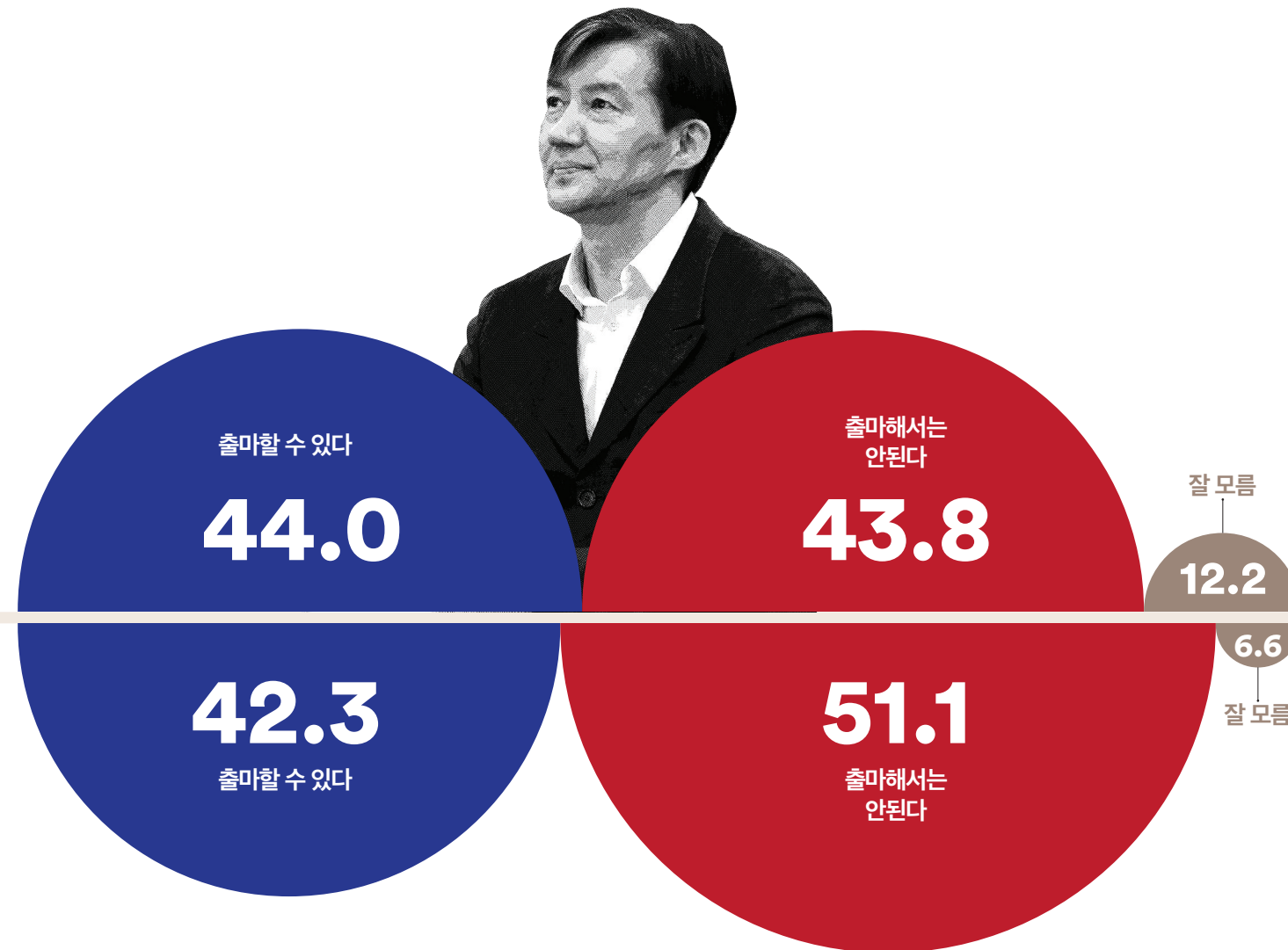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Q.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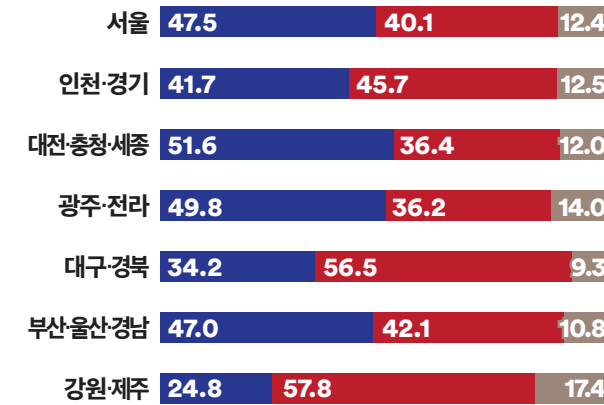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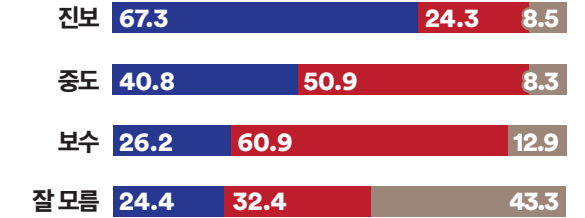


ARS 조사에서는 '출마할 수 있다'가 0.2%p 높고, CATI 조사는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우세
 40대·50대는 '출마할 수 있다', 70세 이상은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우세
 자녀 입시 논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18~29세는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앞섬(ARS 47.4%, CATI 50.8%)
 '출마해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은 중도층(ARS 50.9%, CATI 51.5%), 무당층(ARS 51.3%, CATI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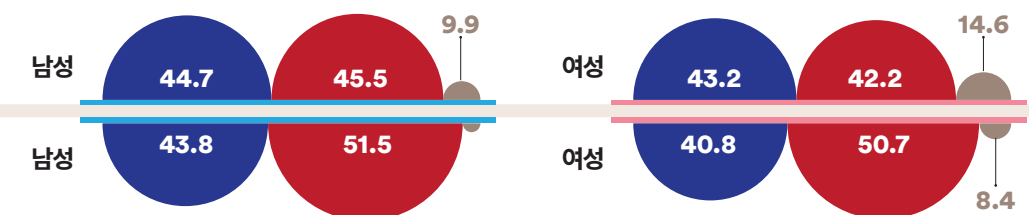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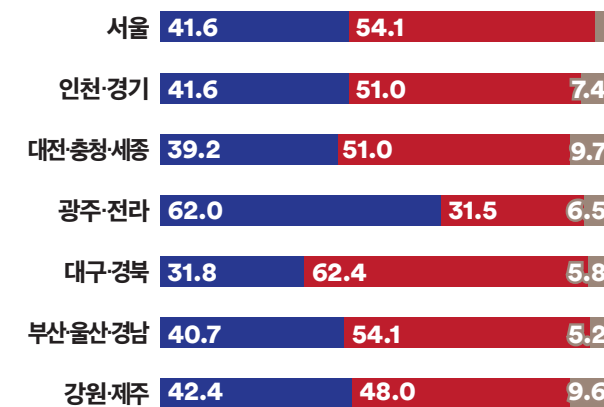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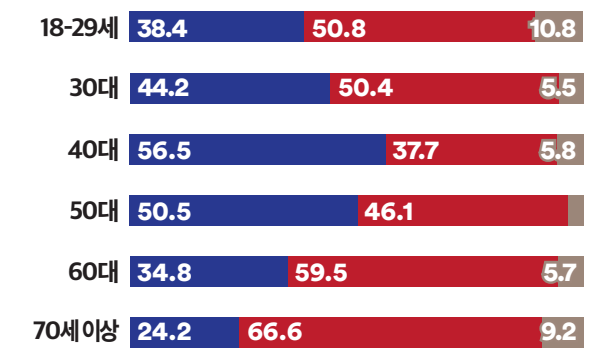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해서는 안된다 잘 모름

여론조사꽃 제4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